



제 334 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2026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6. 2.

감사위원회

I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5담당관 25팀

(2026.1.31. 기준)



□ 인 력 : 137명 / 130명(정원/현원)

(2026.1.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 / 현원)							임기제 *위원장포함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사무운영	
계	137/130	1/0	5/5	32/28	59/52	32/36	0/1	1/2	7/6
감 사 담 당 관	36/32	1/0	1/1	6/4	15/12	6/9	0/0	1/1	6/5
청 렬 담 당 관	22/21	0/0	1/1	6/5	7/6	8/8	0/1	0/0	0/0
공 공 감 사 담 당 관	21/21	0/0	1/1	5/5	8/9	7/6	0/0	0/0	0/0
안 전 감 사 담 당 관	29/28	0/0	1/1	6/6	14/14	8/7	0/0	0/0	0/0
조 사 담 당 관	29/28	0/0	1/1	9/8	15/11	3/6	0/0	0/1	1/1

※ 감사위원장 : (현원) 임기제지방이사관(개방형 2호), 정원 외 인력현황 : 안전감사담당관(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주요업무

감사담당관

-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조정
- 공직기강 확립(계획·평가·점검 및 홍보)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재심통보, 통계관리 등)
- 감사수행(수명사항 처리, 이행실태 포함)
- 시비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청렴담당관

-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운영
-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운영 총괄
-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

공공감사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기관운영 감사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 서울시 일상감사 및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점검

안전감사담당관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 사항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하도급호민관제 운영

조사담당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 공익제보센터 운영 및 조사·처리
- 공무원,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조사 대상

- 대상기관 : 총 788개 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분청·소속기관(117), 시금고(1), 법정 시비 보조단체(13), 투자·출연기관(23), 민간위탁사무(309),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275)

2026년도 예산

세입 예산 : 총 1,602천원

(단위:천원)

구 분	'25년 예산 (최종)	'26년 예산	증 감	%
계	1,080	1,602	522	48.3
임시적세외수입	1,080	1,602	522	48.3
보조금반환수입	532	646	114	21.4
기타수입	548	956	408	74.5

세출 예산 : 총 1,918,13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 (최종)	'26년 예산	증 감	%
계	1,653,134	1,918,133	264,999	16.0
행정운영경비	557,961	490,419	△67,542	△12.1
사업예산	1,095,173	1,427,714	332,541	30.4

○ 세부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5 예산		2026 예산	최종예산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 사 위 원 회	1,653,134	1,653,134	1,918,133	264,999	16.0
감 사 담 당 관	741,861	741,861	654,667	△87,194	△11.8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0,500	20,500	20,500	-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53,867	353,867	326,447	△27,420	△7.7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3,954	33,954	30,568	△3,386	△10.0
기본경비	333,540	333,540	277,152	△56,388	△16.9
청 령 담 당 관	262,294	262,294	590,857	328,563	125.3
청렴문화 확산	99,860	99,860	107,320	7,460	7.5
청렴 취약분야 개선	50,000	50,000	70,000	20,000	40.0
적극행정 활성화	35,200	35,200	20,380	△14,820	△42.1
공직자 재산등록	36,600	36,600	352,207	315,607	862.3
기본경비	40,634	40,634	40,950	316	0.8
공 공 감 사 담 당 관	99,828	99,828	150,577	50,749	50.8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60,300	60,300	111,840	51,540	85.5
기본경비	39,528	39,528	38,737	△791	△2.0
안 전 감 사 담 당 관	155,022	155,022	160,968	5,946	3.8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29,540	29,540	28,900	△640	△2.2
안전감사 활동 강화	72,000	72,000	79,200	7,200	10.0
기본경비	53,482	53,482	52,868	△614	△1.1
조 사 담 당 관	394,129	394,129	361,064	△33,065	△8.4
사전예방적 반부패 조사(점검) 수행	53,520	53,520	53,520	-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01,900	201,900	180,900	△21,000	△10.4
기강감찰 운영	47,932	47,932	45,932	△2,000	△4.2
기본경비	90,777	90,777	80,712	△10,065	△11.1

II

정책목표

비전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목표

청렴도시 서울 구현

시정 만족도 제고

안전한 서울 조성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청렴문화 확산,
비위 예방·근절

- 공감과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
- 사전 예방 감찰·조사 역량 강화로 비위 근절



선제적 감사,
내부역량 강화

-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만족도 제고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확대
-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전 예방,
현장중심 감사

-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시민보호 및 중대사고 예방
-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Ⅲ

주요 추진사업

1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예방 통한 신뢰행정 구현

1-1 공감과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

1-2 사전 예방 감찰·조사역량 강화로 비위 근절

2 선제적 감사와 내부역량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2-1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만족도 제고

2-2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확대

2-3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3 사전 예방과 현장중심 감사 확립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3-1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시민보호 및 중대사고 예방

3-2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1.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예방 통한 신뢰행정 구현

1-1 공감과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

1-2 사전예방 감찰 · 조사역량 강화로 비위 근절

1.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예방 통한 신뢰행정 구현

1-1 공감과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

- ◆ 부패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렴 서울 이미지 제고
- ◆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

□ 부패 취약 요인 조기 발굴, 대응으로 청렴 사각지대 해소

- 청렴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취약 요인 조기 진단 및 개선 추진
 - 자체 조사와 분석을 예년보다 2개월 당겨 실시하고 상반기 대책 마련
 - 취약 기관 중점 관리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2025년		▶	2026년 (2개월 단축)	
4-6월	7~10월		2-4월	5-8월
자체조사, 직원FGI	취약분야 대책 추진	자체조사, 직원FGI	취약분야 대책 추진	

- 업무 투명성 제고, 시민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둔 청렴 모니터링 확대
 - 공사·용역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공정성, 만족도 점검 해피콜 추진 ('25. 5천명→'26. 8천명)
 - 보조금, 민원 업무경험자 등 부패 신고 안내 등 청렴 알림문자 발송 (매월, 취약시기 추가발송)
 - ※ 모니터링 결과 취약 요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상시 점검 및 감조사 실시

□ 청렴한 공직문화 대내외 확산을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시민 체감과 직원 공감을 기반으로 한 청렴한 행정문화 확산
 -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역사) 등 청렴 성과 홍보로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문화 조성
 - 직원이 체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정착
- 글로벌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협력 추진
 - 청렴 교육 콘텐츠 공유, 직원 교육 파견 등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향상
 - IACA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 IACA : 오스트리아 소재 반부패 국제기구, 교육기관(2010년 설립, 대한민국 2011.12월비준) 81개 회원국

1-2 사전 예방 감찰 · 조사역량 강화로 비위 근절

□ 각종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 및 교육 강화

- 선거철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시기별·분야별 감찰활동 강화
 - － 선거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대비 선제적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 － SNS상 특정후보 지지·반대 표명, 부정청탁, 근무기강 해이 등 전방위 감찰 실시
-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비위사례 교육 및 전파
 - － 각종 직무교육과 연계교육,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수요자 중심 교육 실시
 - － 주요 비위사례, 시기별 취약분야 등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 비위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 사건사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실시
 - － 금품향응수수, 성위비, 괴롭힘 등 공직 불신 비위행위 무관용·엄정 조치
- 공익제보,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야별 조사역량 강화
 - － 직장 내 괴롭힘(인권감수성) 등 분야별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조사자 역량강화
 - － 직무 매뉴얼화, 내부 징계조정 회의 운영 등 공정한 조사·처리 시스템 운영

□ 제보자 보호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 안심번호사(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통한 제보자 보호 강화
 - － 대리신고 우수사례 등 스토리텔링형 기사(언론사) 홍보로 활성화 추진
- 공익제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매체 확대 및 대시민 홍보 실시
 - － 언론사 등 웹사이트 활용한 온라인 배너광고 및 영상표출로 홍보 강화



2. 선제적 감사와 내부역량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2-1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만족도 제고

2-2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확대

2-3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2. 선제적 감사와 내부역량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2-1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만족도 제고

- ◆ 시민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로 시민불편 개선
- ◆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시민생활 밀접 분야** 감사 추진

- (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 추진실태 점검으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성과 제고
 - 시립(위탁)병원 기관운영 감사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밀접시설) 시민밀접 분야(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시민불편 해소
 - 시립미술관 기관운영,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여성발전센터 운영실태 감사 등

□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취약 분야** 등 감사 추진

- (민간위탁) 위탁업체 선정,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 전 단계 점검
 - 서울패션허브, 소셜 벤처허브, 푸드뱅크·마켓 관리실태 감사 등
- (장기 미수감) 5년 이상 감사 미 실시 기관에 대한 감사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 인재개발원('18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17년) 기관운영 감사 등

□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등 적극 활용**

- 내·외부 감사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감사품질 제고
 - (내부심의) 감사결과 처리 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 선제적 검토
 - (외부전문가) 공익감사단, 안전감사옴부즈만, 명예하도급 호민관 등 활용

부 서	구 분	주요내용 및 위촉현황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자체감사 시 회계법무세무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감사성과 제고 ※ 위촉현황 : 총 127명(회계사 57명, 노무사 22명, 변호사 10명 등)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옴부즈만	건설공사 및 도시 시설물 등 안전감사 시 전문성 확보 ※ 위촉현황 : 10개 분야 20명(토목, 건축, 상하수도, 기계설비, 전기, 소방 등)
	명예하도급호민관	하수급인 권익보호와 공정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인력 참여 ※ 위촉현황 : 총 16명(변호사 5명, 노무사 4명, 기술사 5명, 건설관련협회 2명)

2-2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확대

- ◆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
- ◆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시민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 현안업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한 현업부서의 사전컨설팅 접근성 제고
 - 사전컨설팅 전 과정에서 신청부서와 의견 공유 등 소통으로 효율성 강화
- 시민공감형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반기)
 - 시민 투표를 반영한 우수사례 선정으로 시민체감도 제고 (평가 비중 50% 반영)
 - 공적자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행정 참여 유도
 - * 중앙부처 포상 우선 추천, 특별휴가 등
- 일상적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3월~)
 - 업무개선, 규제철폐 등 직원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특별휴가 등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로 적극행정 기반 강화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5월)

구분	기존	변경
적극행정 보호관	적극행정 총괄조정 역할의 ‘적극행정 책임관’만 지정	소송 등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 가능
재난안전 공무원 보호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사후 추인 면책 추정
소송 등 지원	징계, 기소 전 수사 단계, 민사상 소송 시 소송수행 비용 지원	형사상 책임 소송에서 무죄 확정 시에도 소송수행 비용 지원
의견제출	-	수사기관에 민·형사상 소송 관련 의견 제출 가능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사항('25.12.30. 시행) 등 반영

2-3 투자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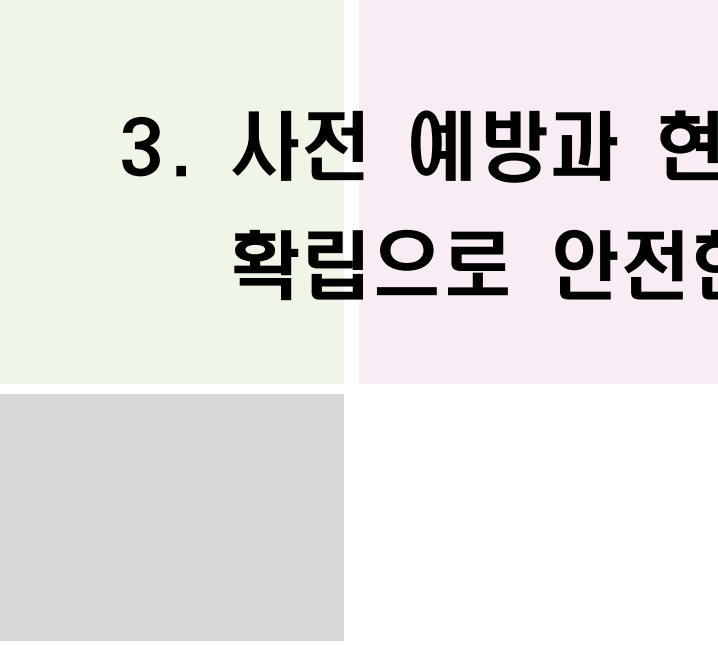
- ◇ 사전 예방, 실질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감사 추진
- ◇ 투·출기관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반복비위 선제 대응, 시정 신뢰도 제고

□ 핵심사업 · 제도 · 성과 제고 중심 감사 수행

- 시민 체감 분야 및 市 핵심사업 감사를 통한 리스크 사전 예방
 - (관광재단) 3천만 서울관광시대를 위한 '3·3·7·7 정책' 감사로 성과지원(6월)
 - (시설공단) 시민 생활밀접 공공시설물 집중 점검을 통한 편의성 제고(10월)
- 내·외부 감사 요구를 반영한 종합감사로 기관 신뢰도 제고
 -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로 기관 운영의 적정성 점검(2월, 6월)
 - ※ 세종문화회관 '21년, 시립교향악단 '17년 기관종합감사 실시
 -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 반복 비위사실 등에 따른 분석·대응(2월)
- 채용·인사, 예산·회계, 계약·민간위탁 등 비위 취약 분야 집중 점검

□ 사전 예방의 내부통제 활성화 및 공통 개선 이행과제 공유

- (정보 공유) 고질·반복적 비위사례 유형화 ⇨ 투·출기관 임직원에 전파공유
 - 투출기관 감사협의회 등을 통한 감사위-투·출기관 간 상호 논의의 장 마련
 - 감사사례집을 활용한 사례 공유 및 주요 반복 비위 사례 예방 교육 실시
- (내부 통제) 市 감독기관, 투·출기관 등과 연계한 비리 예방 시스템 구축
 - 주관부서 자체점검 실시 등 감사위-감독기관-투출기관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 상시적·즉각적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
- (역량 제고) 실질적 · 종합적인 자체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감사 우수사례, 청렴시책 공유 등 부패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 지속 안내
 - 부패방지 시책평가(5~6월), 상임감사 성과 및 자체감사 활동 평가(6~7월)



3. 사전 예방과 현장중심 감사 확립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3-1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시민보호 및 중대사고 예방

3-2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3. 사전 예방과 현장중심 감사 확립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3-1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시민보호 및 중대사고 예방

- ◆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통한 사고 사전 차단 및 시민 안전체감 제고
- ◆ 시민 생활권 중심 취약요인 적극 발굴로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 시민접점 시설 위해요소 조기 포착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피난약자 보호, 안정적 생활기반 유지, 신종재난 대응 등 시민 체감위험 저감
 - (피난약자) 시립병원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와 재해예방 조치 적정성
 - (시민불편) 수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신종재난)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관리 실태



□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 강화를 통한 사고위험 요인 개선

-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 공종 및 건설 안전·품질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대형공사) 도시철도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 (밀폐공사) 도로 및 하수처리 분야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 (건설품질)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 운영실태
- 공무원 안전순찰 강화로 시민불편 현장 및 위험요인 신속 대응



작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 2133-3050 안전감사1팀장: 박종원 ☎ 3052 담당: 이병철 ☎ 305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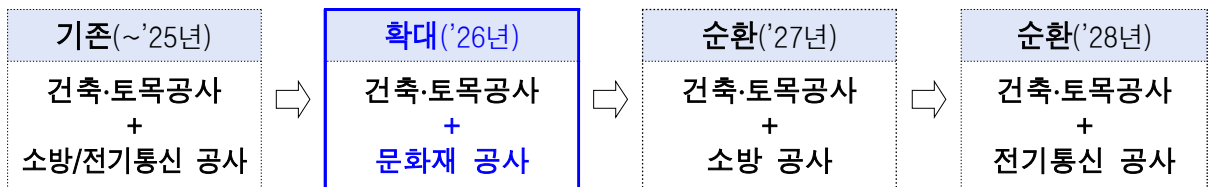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체불 예방

- ◆ 하도급 관리 공백 축소를 통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 예방
- ◆ 임금, 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으로 건설 현장 취약계층 보호

□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

○ 하도급 분야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순차적 해소

- 기존 건축토목공사 위주에서 점검 공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점검범위 보완
- '27년부터는 공종별 순환 점검을 통해 점검의 연속성 및 집중도 확보



○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 확대를 통해 불법 하도급 행위 사전 차단

- (기존) 설·추석 명절 전 체불 예방점검 → (확대) 연 2회 현장점검 추가 실시
- 불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 운영실태 확인 및 자발적 법규 준수 유도

○ 하도급 컨설팅 및 교육 실시로 체불 예방 및 담당자 역량 제고

- 호민관 등 전문인력 활용, 공사관계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공정한도급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자율개선 및 홍보 확대

○ 하도급 자체 점검표 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의 자율 점검 및 시정 유도

- (기존) 법정서류 구비 여부 중심 → (개선) 공종별 핵심 확인사항 중심으로 정비
- 위법행위 사전 차단에 필요한 점검항목 위주로 재구성하여 실효성 확보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확대를 통한 체불 민원 예방

- 유관기관(대한건설기계협회 등) 누리집에 홍보 배너 게시 등 신고 편리성 도모

작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 2133-3050 하도급감시팀장: 엄희원 ☎ 3070 담당: 이상구 ☎ 3073

2026년 월별 감사계획

□ 총 10개 분야 (종합감사 5, 특정감사 5)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사명	대상기관	감사팀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2월 ~ 5월	종합	공공보건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립(위탁)병원 기관운영	시민건강국(공공의료과), 보라매·서남·동부병원	감사1팀
	특정	서울패션허브 관리·운영실태	경제실(뷰티패션산업과), 서울패션허브	감사2팀
	특정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관리·운영실태	여성가족실(아동담당관), 시립꿈나무마을, 아동푸른센터	감사3팀
6월 ~ 9월	종합	인재개발원 기관운영	인재개발원	감사1팀
	종합	여성발전센터 관리·운영실태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 동부·북부 여성발전센터	감사2팀
	특정	푸드뱅크·마켓 관리·운영실태	복지실(돌봄복지과), 광역·기초 푸드뱅크, 자치구	감사3팀
10월 ~ 12월	종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관운영	행정국(시민협력과), 자원봉사센터	감사1팀
	특정	사회혁신사업 관리·운영실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서울소셜벤처허브	감사2팀
	종합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운영	문화본부(박물관과), 시립미술관	감사3팀

□ 총 9개 분야 (종합감사 5, 특정감사 4)

(공공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사명	대상기관	감사팀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공공감사 1·2·3팀
2월 ~ 5월	종합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운영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본부(문화정책과)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연구원 기관운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공공감사3팀
6월 ~ 9월	특정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	투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감사1팀
	종합	세종문화회관 기관운영	세종문화회관 문화본부(문화정책과)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관광재단 기관운영	서울관광재단 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	공공감사3팀
	특정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일상감사팀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실태	미의뢰 사업부서 (분청 및 사업소)	일상감사팀
10월 ~ 12월	종합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서울시설공단 재난안전실(도로시설과)	공공감사 1·2·3팀

□ 총 10개 분야 (특정감사 10)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사명	대상기관	감사팀
1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2월 ~ 5월	특정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특별점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도시철도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균형발전본부	안전감사2팀
	특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및 하수·치수분야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안전감사3팀
	특정	시립병원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시민건강국(공공의료과), 서북병원, 은평병원	안전감사4팀
6월 ~ 8월	특정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강남·강동·남부수도 사업소	안전감사3팀
	특정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분야 하도급 관리실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9월 ~ 11월	특정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기후환경본부, 교통실, 소방재난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1팀
	특정	서울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 운영실태	건설기술정책관, 주택실, 도시기반시설본부, 품질시험소, 자치구	안전감사2팀
	특정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특별 점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사고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안전감사1팀

202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11	17	-	-
	시정·처리요구사항	18	6	12	-	-
	건의사항	7	3	4	-	-
	기타(자료제출 등)	3	2	1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포상을 상·하반기 20건 내외로 포상하고 있으나,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된다면, 건수에 제한받지 않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청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시 선발건수 확대 검토 - (기존) 최우수1, 우수2, 장려4 → (개선) 심사결과에 따라 유동적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및 감사시 면책제도 안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 ' 26년~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수시)
<p>○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 저조 및 분야 간 편차 해소 필요</p> <p>- 공익감사단·안전감사옴부즈만 등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3회 미만 참여 전문가가 다수 존재하여 시정 요구에도 실질적 개선이 없었음. 사업별 참여 인원 편차도 심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외부 1명, '도시철도9호선 위탁 점검'은 외부 4명 등 불균형 존재함. 전 분야 참여 기준 재정비·적정 인원 배치·연간 참여 목표 관리가 필요함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p>	<p>< 공익감사단 - 감사담당관 ></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조사뿐만 아니라, 실·국에서 공익감사단 지원요청 시, 참여율이 저조한 인원들을 지도점검에 우선 추천 ○ 공익감사단 활동 관련 안내(공문) : ' 26.1.16.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이 저조한 인원들을 우선 추천하여 참여율 제고(계속) <p>< 명예하도급 호민관 - 안전감사담당관 ></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감사 위주의 참여 -> (확대) 감사 + 점검 + 자문 등 확대 참여 ○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 참여를 통한 법률적·기술적 지원 확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하도급 호민관 적극활용(수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적극행정 국민신청 건 중 다수가 법정 처리기한(60일+연장 60일)을 넘기고도 ‘처리 중(9건)’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연장 통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이는 적극행정 지침 위반이며, 전담부서(감사위원회)의 관리 책임이 있음. 기한 준수, 연장 통지 의무화, 처리현황 전산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청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건 전부 처리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소, 권익위 공문 확인 즉시 처리기한연장통보 관련 안내 등 - 체계적 관리 : 절차별 현황 관리 <p>※ 신청→접수→자료보완요청→관계기관검토중→처리기간 연장 통지→결과</p>
<p>○ 최근 3년간 연간감사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계획 대비 진행 현황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아 감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감사 계획의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착수, 진행, 완료 현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공개하는 체계 구축 필요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획 변경 시 분기별 시의회 보고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감사 착수 지연과 연도 간 감사 이월로 인해 계획된 감사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연간 감사계획을 연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인력·일정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보고 및 통제장치 마련 필요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연말에 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사항 지속 관리</p>
<p>○ 공익감사단이 12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간 참여 건수와 활동 인원이 매우 저조해 감사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수요에 비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공익감사단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감·조사뿐만 아니라, 실·국에서 공익감사단 지원 요청 시, 참여율이 저조한 인원들을 지도점검에 우선 추천</p> <p>○ 공익감사단 활동 관련 안내(공문) : ' 26.1.16.</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참여율이 저조한 인원들을 우선 추천하여 참여율 제고(계속)</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보호와 면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서울시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과 함께 면책 기준·징계 면제 절차·재난 분야 특례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청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게 표창 수여 또는 포상금 지급 가능 · (신설)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무죄 확정 시 소송비용 지원 · (신설) 적극행정위원회 내부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대리참석 가능 · (신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 제출 요구 가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입법예고 : ' 26.1.29.~2.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26.3.24.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 26.3.27.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 26.4월, 5월
<p>○ 자치구와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 수립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자치구 감사부서와 감사위원회 간의 협력 방안이 있으시면 보고 바람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감사부서와 협력사항 있는 경우 협의회 등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업무와 제출된 업무분장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직무 범위가 혼선되고 있음. 주요시책 점검, 투출기관 범죄,비위 현황 등은 자료 부재로 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함. 법령,조례,업무분장 간 불일치 정비하고 감사대상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마련 필요</p> <p>(감사담당관)</p> <p>○ 주요 시책 상황 점검은 어떤 의미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왜 아직 시정되지 않았는지?</p> <p>(조사담당관)</p>	<p>< 감사담당관 ></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규칙, 업무분장 간 불일치 사항은 파악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일치 사항 정비 추진 <p>< 조사담당관 ></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조직담당관에 ‘주요시책 사항 점검’ 조항 ‘삭제’ 를 요청(’ 25.1.)하였으나, 삭제보다는 적합한(현실에 맞고 명확한) 용어로 ‘변경’ 하는 것으로 협의 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담당관과 협의완료 후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 신청·인정 사례가 거의 없고, 2024·2025년은 신청 자체가 전무함. 제도 인지도 부족, 기각 우려, 신청 회피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원인 분석과 개선조치가 부족함. 기관 안내·홍보·사례 발굴·절차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제도가 실질적 적극행정 촉진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이 필요</p> <p>(청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기준 수립 및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제20조제1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규정 ○ 행정포털 내부게시판을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실시(' 25.1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수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중심의 감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실효적 조치와 기관 책임 등의 인식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바람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관련부서(노동정책과, 인사과, 조사담당관)는 신고사건 처리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 최근('25.1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였음(인사과-40750, ' 25.9.2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차원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및 근절 방안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
<p>○ 반부패 청렴 분야 해외 교육·교류사업이 형식적 MOU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성과와 인력 TO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명확한 아웃풋을 제출할것 (청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 행정국, IACA 실무협의체 구축 및 논의 (' 25.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석사) 과정 (2년 이내) - 지정기관 직무과건 (6개월, 2년 이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 실무회의 개최 예정 (' 26.3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과건 시기, 내용 등 지속 협의 - 인재개발원 청렴 e-러닝 프로그램 추가 협의 <p>※ 협의결과에 따라 행정국-IACA 별도 협약 추진 (연중)</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안심변호사 법률 상담 건수가 2022·2023년 30건·25건에서 2024년 8건, 2025년 9월 기준 2건으로 급감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인지 부족·접근성 제약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필요</p> <p>(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실적은 ' 25년 17건으로 전년(8건)대비 9건(113%) 증가하였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다각적 홍보를 통해 안심변호사 인지도를 향상시켜 법률 상담 건수를 늘려가겠음
<p>○ 안심변호사 상담 구조 접근성 개선 및 회신 여부 등이 변호사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사각지대 개선 등 제도전반 재정비 필요</p> <p>(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변호사 안내 링크 개선, 중복 상담 방지 팝업 안내 추가 등 응답소 내 안심변호사 메뉴 가시성 개선 완료(' 25년) ○ 법률상담 회신 여부는 수당 지급시 확인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변호사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하겠음
<p>○ 안심변호사 홍보 예산이 형식적 수준(포스터·영상 제작)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시민 인지도 향상 바람</p> <p>(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배부처 확대로 인지도 확산 ○ 홍보동영상 제작, 다양한 미디어 활용하여 정보노출 확대 ○ 언론사 홍보 및 언론사 온라인 배너광고 노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신고 우수사례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형 기획기사 보도 - 핵심키워드 발굴하여 웹사이트 및 앱연계 배너광고 등 정보노출 극대화 - 홍보동영상 분기별 노출로 제도 인지도 극대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아 개선 필요 (청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5. 청렴 시책 관련 직원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관(부서)별 청렴서포터즈 - 기간 : ' 25.12.29. ~ ' 26.1.14., 17일간 - 내용 : 정책추진방향, 교육,홍보 등 시책평가, 서포터즈 운영 개선과제 등 ○ 설문 결과 청렴정책 반영 검토 (' 26.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대상 반복 문자발송 등 단방향 캠페인이 내부 구성원의 청렴 체감도와 괴리를 만들고 있어 실질적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 (청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공감하는 청렴정책 수립 (' 26.2.) ○ 직원 자체설문 및 FGI 추진(' 26.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구성원의 공직환경에 대한 체감과 피드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청렴도 개선계획 마련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할 것 (청렴담당관)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외부전문가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분야별 운영 개선 필요</p> <p>- 외부 전문가 배치의 차이는 감사의 형평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 있음. 사안 중요도·위험도 기반 배치기준 마련, 분야별 외부인력풀 확대, 참여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높일 필요 있음</p> <p>(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점검 기관의 공익감사단 활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도점검에 참여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p>○ 서울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적발이 3년간 14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에도 과태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체계 개선이 필요.</p> <p>특히, 소방직에 집중되는 임의취업의 구조적 원인 등 포함하여 문제 전반 재검토하고, 예방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p> <p>(청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감사담당관, ' 25.11.19)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개선방안 의원실 보고(서면) 완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조제1항제9호(취업심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소방경(6급) 이상 천원, 소방위(6급)·소방장(7급) 일부 포함(현장직만 제외) → 개정안: 소방위·소방장은 ‘예방·회계·감사’ 부서 근무자에 한해 포함 -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 취업개시 30일 전 → 14일 전 심사요청 - 제33조의4(우선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한 자만 우선취업 신청 가능 → 개정안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제출’ 요건 삭제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대상 제도 홍보(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 대상 (퇴직전) - 전직원 안내(분기)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 규명과 징계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자치구 책임기관에 대한 후속 감사·조치가 미흡한 만큼, 감사위원회는 행안부 감사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체계 마련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 용산구청장 ‘경고’ 처분(’25.11.7.) ○ 용산구 ⇒ 행안부 재심의 신청(’25.12.5.)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의 재심의 검토 결과(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따라 용산구 홈페이지에 10일 이내 공개 등 조치 예정(용산구)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투출기관 포함 감사범위·절차의 명확한 기준 설정</p> <p>- 투출기관의 범죄·비위 통보 여부 및 점검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 수행 근거가 혼재함. 투출기관 감사기능 확대 정책과 연계해 통보체계, 점검항목, 후속조치 기준을 표준화해야 함. 기관 간 책임 배분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함.</p> <p>(공공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 별도 ○ 감사위원회에서는 6개 분야(인사 조직, 채용, 복무, 예산·회계, 계약, 물품)에 대한 자체점검 지원, 규정·사례집 배포,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복무 등 주요 반복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24년부터 매년 투출기관 자체 감사 실시 중 ○ 한편, 「지방공기업법」, 「지방 출자출연법」 상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임직원 범죄사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투출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비위사실 관리에 한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25.3월 음주성비위 사건 등에 대해 기관 통보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26. 1월 현재) ※ 법안 통과시, 임직원 음주, 성범죄·비위 등 기관별 관리 가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출기관 자체점검 결과 평가(~ '26.2월) ○ 미흡기관 특별점검 실시('26.3월~) ○ 매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행-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기관책임 체계 강화</p> <p>- 조사 증가 및 법원의 배상책임 확대 판례를 고려해, 감사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상시 모니터링·위험부서 특별점검 등 예방중심 체계를 강화해야 함. 행정국·인사부서와 협업체 개념 정의·조사절차·문서화·교육·사후관리 기준을 통합한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관련부서(노동정책과, 인사과, 조사담당관)는 신고사건 처리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 최근('25.1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였음(인사과-40750, ' 25.9.2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차원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및 근절 방안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
<p>○ 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이에 위원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기준과 검증 체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전문가를 추천받아 내부 검토 거쳐 위촉('25.7.)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 시 구성기준 강화 및 검증체계 마련하여 면밀히 검토 후 위촉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부서·출연기관별로 제각각 처리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로 민원·분쟁·감사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음. 감사 위원회와 재무국이 협력해 무단점유·변상금·사용료·협약 절차 등을 아우르는 통일된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담당자가 감사 지적이나 민원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유재산 업무 매뉴얼 배포(재무국, '25.2.) ○ 공유재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지적 사례중심 공유재산 법령 및 제도 교육 실시(재무국, '25.8., '25.9.)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재무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알기쉬운 공유재산 업무매뉴얼 배포(연 1회, '26.2월) ○ 찾아가는 공유재산 교육 진행(연 2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의 ‘이코모스 영어 공문 해석 불가’ 등 업무소홀에 대한 감사사항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5.11.19 의원실 서면자료 제출 - 감사 실시사항 없음
<p>○ 23년도 6월 아쿠아슬론대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감사사항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5.11.19 의원실 서면자료 제출 - 감사 실시사항 없음
<p>○ 주요시책 점검 기능의 정의 및 조례 반영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책’ 용어 해석이 기관·조례·실무 간 상이해 행정감사에서 반복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시책 범위, 점검 방식,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감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시행규칙 개정 및 업무분장 재정비 필요 <p>(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조직담당관에 ‘주요시책 사항 점검’ 조항 ‘삭제’를 요청(’ 25.1.)하였으나, 삭제보다는 적합한(현실에 맞고 명확한) 용어로 ‘변경’ 하는 것으로 협의 중임 ○ 조직담당관과 협의완료 후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